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6호
2010. 12.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송광웅 ■ 편집인 정수현, 신철균
■ 주소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대 인문관 407호
■ TEL 02-3475-2522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연구윤리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본회 학회지편집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시비다. 주로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중복게재, 제자논문 도용, 연구비 이중수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연구윤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관행이었으나, 보다 엄격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전자에는 타인 논문 표절과 제자논문 도용, 연구비 이중수혜 등이 해당될 것이며, 후자에는 자기표절과 중복게재가 해당될 것이다.

2010년에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분과위원장 모임에서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시비를 가리기 위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시비를 가리는 작업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학회의 윤리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편집·발간 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학회규정에는 자기표절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중복게재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규정』 제6조제1항은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 없었다. 『윤리위원회규정』 제6조제3항은 “교육행정학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포함) 내용에 대한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내용상 표절과 중복게재를 구

분하고 있고, 『학회지편집·발간규정』 제3조는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중복게재’란 이미 학회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편집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토론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석·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학회지에 발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를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금까지 박사학위논문을 출판되지 않은 것(unpublished)으로 보았으며,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학회지에 게재함으로써 박사학위논문이 학회지를 통해 출판된 것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가 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학회에 발표할 경우, 학회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패를 수여해온 전통이 이를 말해준다.

석·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학회지에 발표할 때 학위논문의 요약 또는 발췌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중복게재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현행 학회 규정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박사학위논문을 온라인 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석·박사학위논문도 출판된 것으로 본다는 학회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박사학위논문을 출판된 것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석·박사학위논문 요약·발췌 발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학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연구윤리라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게재 논문의 분량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내용을 요약 또는 인용할 경우 원래의 학위논문을 논문 제목 각주에 밝히도록 하고, 50% 미만인 경우 본문 중에 밝혀도 무방한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학위논문 요약 또는 발췌 논문을 독립된 연구논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학위논문에 대한 요약 또는 발췌임을 밝혔을 경우 또 하나의 논문으로 인정할 지 여부는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학회는 연구성과 공유 차원에서 학회지 발표를 허용하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토론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자기표절이 성립하는 개념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를 자기표절로 규정할 경우 논문 전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학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연구윤리지만, 학위논문과 달리 게재 논문의 분량을 기준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이 50% 이상 인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셋째, 연구보고서를 요약하거나 일부 발췌하여 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이 자기표절이나 중복

게재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정부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결과물로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를 요약 또는 발췌하여 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학위논문과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발간할 때 ISBN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는 저서에 해당하며, 저서를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통상 ISBN 번호가 부여되지 않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성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개인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학회지를 통해 학문공동체에 공유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ISBN 번호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요약 및 발췌를 통한 학회지 발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재 논문의 분량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내용을 요약 또는 인용할 경우 원래의 연구보고서를 논문 제목 각주에 밝히도록 하고, 50% 미만인 경우 본문 중에 밝혀도 무방한 것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석·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학회지에 발표할 때,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일부 논문의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각 대학이 교수업적평가를 강화하면서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위논문 지도 과정에 지도교수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도교수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명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데 따라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석·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였음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석·박사학위논문임을 밝힐 경우 해당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회 차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의 공동저자 참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요약 및 발췌 논문은 학위취득자의 단독논문으로 보고 지도교수의 공동저자 참여를 억제하되,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각주에 반드시 석·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또는 발췌한 논문임을 명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연구환경은 학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정식으로 게재할 경우와 학회지 게재 논문의 일부를 잡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한 중복게재 논란은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듯하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표절과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복게재 논란도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학회 규정에 대한 보완을 기대한다.



| 시론 |

소석논문상 제정에 대하여

정태범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본회 소석논문상위원회 위원장)

소석논문상은 2009년에 제정되어 그 해 12월에 제1차 논문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소석 강길수 교수님은 88세를 일기로 2008년 3월 21일 타계하시고 그 해 10월 이운자 사모님(전국 주부교실중앙회 회장)께서 강영삼 교수와 나를 함께 불러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강길수 교수님의 장례에서 아들처럼 역할을 하여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소석논문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운자 사모님은 소석 교수님의 유업에 대한 논문상을 제안하셨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기금의 규모도 말씀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외의 제안에 다소 놀랐다. 사모님께서 말씀 하신 기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말씀드렸다. 우선 교육행정학회 이사회에 제안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다음 학회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규정에 따라 시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개략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강영삼 교수와 나는 학회의 신재철 회장에게 논문상의 취지와 그 기금을 알려드렸다. 신회장은 이를 안건으로 받아드려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며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어 총회에서도 이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안에 따라 소석논문상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소석논문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강영삼 교수를 추천하였는데 강 교수님이 사양하셔서 결국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본인이 맡게 되었다. 서로 추천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소석논문상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소석논문상 규정)을 성안하고 검토 심사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총회에 수락을 받았다. 이로서 소석논문상 규정은 확정되었다. 소석 강길수 교수님의 유지는 사모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학회에 논문상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학회의 영예와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학문에 대한 연구력을 키우고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여 학문적 토대를 넓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논문은 학술분야의 발전은 물론 실천의 과학적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논문을 써서 발표한 연구물은 학술의 발전은 물론 현실 발전과 후속 연구에 크게 기여한다. 어떤 현상도 현학적이거나 담론으로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논문이 덧붙이면

과학적 기초를 이룬다.

여기에 특히 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시상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장려하여야 할 장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의 결과가 시상제를 통하여 더욱 장려하고 발전한다면 연구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근래 교수들은 연구물로서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 지에 수록된 논문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공인된 학회지에 게재된 것이다. 그 공인된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수상을 한다는 것은 학문의 연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소석논문상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9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9명 중 6명은 정년을 한 교수이며 4명은 현직에 있다. 퇴직교수가 많은 것은 논문의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현직에 있지 않는 전문가를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직의 1명은 당연직으로 교육행정학회의 시상 연도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회원이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시상하기로 하였다. 논문을 모집하여 수상 대상을 선별할 수도 있으나 학회지에 수록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우수 논문을 시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에는 2007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논문을 수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논문 발표 후에 생길 수 있는 논문 하자의 거치기간 일 년을 두자는 의견에 따라 2007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0년 논문 수상의 대상은 2008년의 학회지가 된다.

따라서 2009년도에 위원들은 2007년도의 '교육행정학연구' 지 4권의 논문 65편 가운데 한 편을 수상 후보로 선별하는 것이다. 그 한 편을 선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꼭 한 분이 한 편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분이 한 편씩 선별하는데 겹치는 논문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행정학회에서는 2009년 소석논문상 제1회 수상자를 11월에 선정 12월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위원회의 제1차 심의에서 위원 9명 중 한 분이 해외여행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8명이 투표를 하게 되었다. 최후의 두 논문이 투표에서 4대4가 나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동 수상자를 내게 되었다. 수상자는 이광현 교수(부산교대)와 김현진 교수(국민대)이다.

2010년에는 제2회 소석논문상 심사에서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08년의 학회지 4권에 논문은 70편이었다. 논문의 대상 심사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발표한 내용의 요약 발췌 논문은 후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위원들은 그 많은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편을 선정하였다. 본인만 하여도 10번 이상을 본 것 같다.

위원들이 제1차 회의에서 한편씩 제출한 것 가운데 한 편을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박사논문과 겹쳐서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또 한 편씩 제출하여 심사하였는데 한 편씩 제출한 논문

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나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는 후보자를 내지 말자고 하였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었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다. 학회지의 논문에서 문제점은 박사학위논문이나 타보고서의 요약 발췌 후 논문의 첫 장 하단에 각주의 누락이나 불분명 그리고 위원들의 논문 선별에 대한 어려움 등이었다. 이들은 이미 임연기 차기 회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래서 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의 수정과 소석 논문상의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3월 25일 창립 이래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지금 학회 회원은 전체 약 2,000명 정도인데 학회지를 받는 회원은 약 600명이다. 교육학회의 산하 단체로서 그 규모가 가장 큰 단체이다. 정말 대규모의 학술단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회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도 있지만 연구력의 향상과 정보의 교환이 중요 활동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학회의 연구력은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공인된 학회지를 일년에 4권이 발간한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회의 활동 중에 논문의 발표와 학술대회의 발표 및 국제 대회 개최 등 회원들의 연구력과 활동은 눈부시다. 그리고 많은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본인은 논문 수상자 선별에서 60여편의 논문을 훑어보면서 젊은 학자들의 연구력에 대하여 희망의 앞날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논문의 질은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있으나 논문에 참여 의욕은 대단하다고 보았다. 학술 발전은 학회의 단순한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논문은 그 발전에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논문상이 학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평가 작용을 한다. 우수한 논문에 대한 수상 규정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소석논문상은 교육행정학회 초대 회장인 강길수 교수님의 호를 따서 '소석 논문상'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 교육행정학회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소석 논문상으로 사모님께서 따님과 함께 3,000만원의 기금을 내놓으신 것이다. 여기에 누구라도 기금을 내놓을 수 있다. 남정걸 전회장께서도 일조를 하셨지만 본인도 일조를 하였다. 그래서 기금은 4,100만원이 되었다. 이것이 불어나서 더 큰 기금이 된다면 연구에 더 큰 격려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행정학회의 활동, 회원들은 논문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내 학회는 물론 국제 학회에서도 큰 진전 있기를 바란다.



| 시론 |

교육행정학,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육행정관련 자격제도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들어서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직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육행정학도로 자처하면서 공부해 온 필자의 희망은 새해에는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직이 학문으로서, 직업으로서 다시금 도약, 발전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교육행정학의 위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수는 2003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르렀다. 회원들은 전국 대학의 교육행정 교수들을 핵심으로 하여 대학원 학생들, 교육행정가, 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육행정학 관련 전공자들이 두루 섞여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창립된 지 수십 년 동안 역동적으로 활동해왔으며 명실공히 한국교육행정학 연구의 중추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학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교육행정학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교육행정학의 패러다임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행정전공자수가 크게 줄어 교육행정학 프로그램 자체의 존재의의가 의심받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없는 학문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므로 향후 교육행정학계는 그 수요 창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육행정직의 위기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직’ 분야에서도 범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 행정직과 교육행정직의 관계에서 교육행정직의 전문성이나 존재 의미가 점차 도전받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 편입되었고 교육 행정직이 갖는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나 체계성, 직무표준능력, 양성체계 등이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장 등 교육행정분야의 핵심직의 직업윤리 의식의 저하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학직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비롯한 교육행정직의 인사행정의 혼란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직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안정성, 독자성 등에 있어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 제

그리하여 교원직과 교육행정직의 관계, 교육행정직의 양성문제,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직의 관련성 등이 한꺼번에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행정학은 그 학문적 정체성과 역할의 재정립을 서둘러야 하고 한편 교육행정직은 그 직업적 정체성과 양성 체계 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만약 교육행정학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필요한 ‘이수 과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육행정학이 교육행정직과 관련하여 발전해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직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교육행정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육행정직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미룰 수 없다.

2. 교육행정직과 교육행정학의 ‘수준’ 구분

교육행정직 직무능력 수준의 구분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곧 교육행정직의 전문성과 관련된다. 먼저 교육행정직의 전문성, 예컨대 9급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직원과 3급, 2급 등 고위 교육행정직원의 직무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이 다른 것이다. 교육행정직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교육행정학 내용의 수준 구분

이와 대응하여 교육행정학도 ‘수준’ 개념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대학 수준, 4년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연수원의 각종 과정의 교육행정학이 서로 다른 내용과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행정학의 전문성도 측정하기 어렵다.

수준 구분의 의미

이와 같이 교육행정직과 교육행정학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행정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다양한 단계의 교육행정직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학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교육행정직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업무능력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교육행정학과 교육 행정직이 체계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

3. 교육행정 관련학력과 직업자격의 통합관리

국가수준의 자격제도

국가 수준의 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는 다양한 자격들을 그 수준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격제도를 발전시킨 여러 나

라들은 국가적 수준의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그 속에서 다양한 교육과 능력, 그리고 직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직(학력과 직업자격)의 연계

교육행정학의 경우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그리고 정부의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 등을 분석하여 일목요연한 교육행정학 프로그램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횡적으로는 이들 프로그램간의 연계여부와 정도를 정리해야 한다. 호환성을 제고하면서 일종의 학점인정제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행정직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계열의 직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등급과 전문성 정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직 각각이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된 후에는 양자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각 타당한 수준의 교육행정학 이수자격과 교육행정직의 임용자격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행정과 관련된 많은 자격들이 개발될 수 있다. 학력에 관련해서는 전문대학 교육행정학 수료자격, 학사수준 교육행정학 수료자격, 석사 수준 교육행정학 수료자격 그리고 박사 수준 교육행정학 수료 자격 등을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직업상의 자격으로는 학교경영 자문에 관한 자격, 학교 설립과 폐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학교회계 전문자격, 학교 시설에 관련된 전문 자격, 학교행정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 등이다. 이러한 학력상의 자격과 직업상의 자격이 세분화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과제

교육행정학 프로그램의 혁신

먼저, 대학원 과정, 학사과정, 연수원 과정 등의 교육행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 프로그램은 획일성을 탈피하고 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별로 목표, 교육내용, 교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해가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직 임용제도 혁신

교육행정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용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직은 초급직위부터 고급직위까지 그 직무능력이 분석,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행정학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이수자격과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직의 임용은 각 직위에 부응하는 학력과 자격을 가진 자들을 정확하게 선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행정분야 전문 자격체제 구축

교육행정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 행정, 회계, 변리 등 다른 분야의 자격제도처럼 교육행정분야의 다양한 자격들을 개발하고 교육행정학 프로그램들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I 시론 I

유치원 의무교육은 언제 하나요?

박 삼 철(단국대학교 교수)

I.

현행 한국의 학제는 1948년 이후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6-3-3-4제의 school ladder system 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들 한다. 이 학교체제는 맞는 말인가? 참, 이상하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어디에 속하는가? 유치원은 한국의 학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한국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학제는 1-6-3-3-4제라 해야 하지 않을까? 명백히 법적으로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제의 기본 골격에서 유치원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부족했던 60여 년 전에 구상했던 학제를 지금껏 무관심 속에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한국의 학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II.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표-1>이 맞는 통계라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가정은 꽤 많은 편인가 보다. 유치원에 취학하는 아이들은 4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60%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어느 사설 기관에 다니고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보낼까?

<표-1> 학교급별 취학률 ('08~'10)

구 분	취학률		
	2008	2009	2010
유 치 원	37.5	39.5	40.5
초등학교	99	97.9	98.6
중 학 교	93.2	96.2	97.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 2010년 12월 26일)

2011년에는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OECD의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며, 이제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엄청나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따라 2011년도 국가 예산 규모는 309조 1천 억 원 정도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약 41조 3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 예산은 약 35조원 규모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 관련 예산이며,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1조원 정도로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2.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0).

<표-2> 2010년과 2011년의 교육분야 예산 비교

교육예산 분야	2010년		2011년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25,467	85.1	355,054	85.9
고등교육 부문	50,390	13.2	50,501	12.2
평생·직업교육 부문	5,378	1.4	6,441	1.6
교육일반	1,272	0.3	1,255	0.3
합 계	382,507	100.0	413,251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예산안 설명회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의 여러 초·중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학교를 방문할 때 마다 선진화된 시설에 깜짝 놀라게 된다. 교과교실, 수천만 원 하는 전자칠판, 냉난방시설에 빔 프로젝터, 각종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학교 운영비 등 ... 정말 우리 학교들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해외 학교들을 탐방하고 온 여러 교장선생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학교만큼 시설이 좋은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참 좋은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계와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말 좋은 일이다.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학교교육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 분명하다.

III.

세계 일류 교육시스템 구상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을 생각하면 그리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연히 한 사립 유치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모든 유치원이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가슴이 답답한 채 떠나오고 말았다. 열악한 교육 시설과 기자재 현황,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교원 구성과 처우 문제, 유치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 등 초등학교와 비교할 때 너무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우리는 유아교육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옆집은 월수입 250만 원 정도에 아이 유치원비가 월 45만원, 방과후수업비와 각종 잡비를 포함해서 약 55만 원 정도를 매월 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집은 비교적 경제 상황이 좋아 월 100여만 원인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한다. 반면에 또 다른 가정은 가정 형편 상 두 명의 자녀를 원비가 저렴한 구립 유치원에 보낸다고 한다. 이들 모든 가정에서는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가 가계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두 자녀를 갖는 것은 꿈꾸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들 부부를 만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두 자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표-3〉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06년)

(단위 : %)

	유아교육(3세 이상)		초등 및 중등교육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OECD 평균	80.7	19.3	91.2	8.8
한국	46.3	53.7	77.6	22.4
호주	63.1	36.9	82.8	17.2
일본	43.4	56.6	89.9	10.1
미국	77.6	22.4	91.5	8.5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6쪽 내용을 요약함)

〈표-3〉은 OECD평균과 주요국의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비를 공부담 교육비와 민간부담 교육비로 구분하여 상대적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평균은 유아교육의 경우 공공재원이 80.7%이며 민간재원이 19.3% 정도였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공공재원이 91.2%, 민간재원이 8.8% 정도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민간 부담률이 약 22.4% 정도,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률은 8.5% 정도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률이 22.4%인데 비하여 유아교육의 민간부담률은 53.7%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을 학부모 등 민간에게 지나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안정적 정착단계에 있지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은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되는 사부담 교육비의 부담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 의무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국군의 사격 훈련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비록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지만, 연평도의 피어오르는 검은 포화는 6.25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한다. 6.25 전쟁은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신생 대한민국의 산업 시설을 거의 대부분 파괴하고 말았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많은 학교들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다. 전후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학교와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당시의 국가 재정과 교육재정으로는 학교를 신축하여 충분한 교실을 확보하기에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었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서도 당시 정부와 교육당국(문교부)에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54년부터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추진하였다. 교육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씻고 국가 재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후 재건사업에도 여력이 없을 터인데 국가 살림을 아끼고, 쪼개고, 요리 조리 옮겨가면서 차근차근…… 마침내 1959년 초등교육의무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극빈한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국가 대사를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 했으며, 국가는 국가대로 한 톨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 쓰고자 했던 세심하면서도 강한 의지의 결과였을 것이다.

IV.

유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업의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 확보의 문제뿐 아니라 교원 자격제도와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국가 수준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다. 우리는 오늘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등교육 의무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60여 년 전 초등교육의무화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선배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며 초등의무교육을 추진·완성하였으며,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해 중학교 교육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고, 형님만한 아우가 없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중요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단지 급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자조 섞인 명언(?)은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교수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은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격화소양(隔靴搔癢)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겠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학회 활동 안내

1. 학술대회

● 제38차 연차학술대회 및 159차 학술대회 개최

일 시 : 2009년 12월 10일(토) 13:00 - 18:00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주 제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2. 총회 및 각종 회의 사항

● 정기총회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3:00 - 18:00

장 소 :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안 건 : 2010년 결산 및 사업실적, 2011년 예산 및 사업계획 등

● 이사회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1:30 - 12:50

장 소 : 남촌 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2010년 결산 및 사업실적, 2011년 예산 및 사업계획 등

● 국제학술위원회

일 시 : 2010년 11월 15일(월) 16:00 - 18:00

장 소 : 외백 증식당(여의도)

안 건 : 한·일 교육행정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등

● 소석논문상위원회 2차 회의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12:00 - 14:00

장 소 : 남촌 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수상 논문 논의

● 소석논문상위원회 3차 회의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1:00 - 13:00

장 소 : 남촌 한정식(서울교대)

안 건 : 수상 논문 결정

●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 3차 회의**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11:00 - 13:00

장 소 : 서울교대 대학본부 7층 총장회의실

안 건 : 39대 부회장선거 개표 및 부회장 확정

● **편집위원회**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8:00 - 20:00

장 소 : 서울교대

안 건 : 학회현안 논의 및 편집위원회 활동 정리 등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8권 (2010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 재 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079801-04-057012(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논문)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0. 11. 1 - 2010. 12.31)

- 개인회원 : 구희완, 권나현, 김광호, 김재금, 김홍관, 김희경, 박영규, 서승현, 엄상현, 윤영수, 황보식 (이상 11명)

◎ 연회비 납입현황(2010. 11. 1 - 2010. 12.31)

- 개인회원 : 강용관, 강원근, 김대유, 김성열, 나운선, 박남기, 박정희, 박호근, 반상진, 백승관, 신상명, 신중식, 윤일경, 이석경, 이정미, 이정화, 정영수, 정태범, 조동섭, 진동섭 (이상 20명)

- 기관회원 : 국회도서관, 서울여대, 영남대 (이상 3곳)

※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소식

▣ 제38차 연차학술대회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80여명 참여

제38차 연차학술대회는 12월 10일(금)에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이라는 주제로 서울교대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철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원 원장)가 기조발표를 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기획,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 단위학교의 교육기획, 대학의 교육기획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광호 박사(교과부)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기획을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은 김재웅 교수(서강대)가 발표를 하였다. 토론은 조동섭 교수(경인교대), 박수정 교수(충남대)가 각각 맡았다.

제2부에서는 본회 학술위원인 김혜숙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단위학교의 교육기획은 박제윤 교장(영등포고)이 발표하고, 양성관 교수(건국대)가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 발표인 대학의 교육기획은 이차영 교수(한서대)가 발표하였으며 신현석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하였다. 1부, 2부의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방청객의 질의와 발표자들의 응답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인사말씀을 하는 송광웅 회장〉



〈사회를 보는 김광호 박사〉

■ 제 39대 부회장 선출

허병기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제 39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2010년 학회 요람 발간

학회 요람이 2007년 이후 3년만에 발간되었다. 학회 요람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발간되며, 학회지를 받는 정회원에게만 발송될 예정이다.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kssea1@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07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2) 3475-2522
- 회 장 : 송광용(010-8974-9430, 02-3475-2200)
- 부회장 : 임연기(011-9870-2053)
- 사무국 : 정수현 사무국장(016-226-6356)
신철균 총무간사(017-201-3998)
김효진 편집간사(010-5120-0814)

※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제39대 사무국이 인수인계를 받아 학회비 통장 및 사무국 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ssea.or.kr)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년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38대 사무국 드림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